

#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

## 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준비해야할 과제 —

지난 1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. 이 글은 발표내용 가운데 일부인 「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준비해야할 과제」편을 편집상 부문 발췌한 것이다.

이 천 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

### 정보화 추진 정책과제

- 정보화 투자에 대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와 국가적인 현안 해결에 있어서의 유효성에 따른 정보화 추구
-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보화 사업에서 투자가 미흡했던 정보화 요소에 대한 보완으로 '균형 정보화'를 추구
- 현재의 정보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점진적 정보화 추구

### 경제분야의 정보화

- 네트워크 경제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
  -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정보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내부 업무의 정보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
  -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설비투자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함
    - 중소기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이 낮아 생산, 재고관리, 판매 등 제반기업 활동

에 있어 이들이 사이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

- 기업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투자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
  - 기존의 그룹VAN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을 통하여 EDI를 이용하도록 함
  - 중소기업 EDI 전용 인터넷망을 구성하고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
  - 정부가 인터넷 EDI에 필요한 SW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저렴한 요금으로 리스
  - 기존의 VAN과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정보망을 구성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
- 인터넷은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
  - 중소기업이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을 지원
  -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생산기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 홈페이지

이지를 체계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홍보 강화

- 물리기반망 : 신뢰성 높은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망 구성을 위한 투자
- 응용서비스망 : 그룹VAN과 인터넷망과의 연동
- 시스템 : 중소기업 내부정보화 투자지원 및 SW 보급지원
- 콘텐츠 : 중소기업 홈페이지 작성 지원

□ 물류정보 공동활용으로 물류자원의 활용 극대화

- 도로, 항만, 수송수단 등 물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의 위치, 화물의 수량, 운송일시 등 운송화물 관련 정보와 가용 운송수단의 위치, 운행스케줄등 운송수단에 관한 정보가 중요
  - 이러한 정보는 운수업자를 알선, 소개시켜주는 (화물자동차)운송주선사업자들 사이에서 분산되어 있음
  -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사업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통합, 공유함으로써 공차율을 줄이고 적시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함
  - 즉 정보공유를 통해 한정된 물류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화
- 현재 추진중인 종합물류정보망을 금융망, 무역망과 연계하여 운송, 통관, 선적 등 수출입 관련 업무를 One-Stop 서비스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

- 응용서비스망 : 종합물류정보망, 무역망, 금융망 연동
- 시스템 : 물류정보 통합 DB 구축

□ 금융정보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

- 정보통신망을 통한 홈뱅킹, 펌뱅킹으로 가정과 기업에서 일상적인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지점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
  - 현재도 홈뱅킹, 펌뱅킹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안전성과 보안성의 문제로 확산에 장애가 되므로 금융망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홈뱅킹, 펌뱅킹에 대한 유인을 확대
-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완전개방된 자

본시장에서의 핫머니 등 투기성 자본 수출입을 모니터하고 대응책을 마련

-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력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금융감독기관의 정보화가 절실함

행정분야의 정보화

- 무한경쟁의 21세기 국제경쟁 질서하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됨(고객지향적 정부의 개념이 등장, 공공부문에 기업경영적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)
- 정부내부의 정보공동이용 환경의 조성, 문서의 전자화, 단순 확인 및 심사과정 등의 자동화를 통하여 업무를 간소화하여 기업과 국민으로부터의 민원을 One-Stop 서비스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
- 우선적으로 각 정부기관은 내부 업무과정 및 민원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절차, 중복적인 문서행위를 과감히 폐지, 민원인의 문서제출 행위 중 담당자의 전자조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발굴하여 전자조회로 대체
- 특히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 민원업무의 정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산업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DB화

- 물리기반망 : 초고속국가망에 대한 지속적 투자
- 응용서비스망 :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 환경 도입
- 시스템 : 구내통신망과 구내 정보통신설비 지속적 확충
- 콘텐츠 : 산업정보의 DB화 및 기업에 제공
- 제도 :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관련 제반 법규 제·개정

교육·문화분야의 콘텐츠, SW분야 육성

- 국가정보기반의 요소 중 콘텐츠 분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콘텐츠의 축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콘텐츠 분야를 육성·발전시켜 나가야 함

- 교육용 SW, 콘텐츠 개발과 도서관, 박물관 소장 문화자료의 디지털화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함
- 현재 시장성이 높은 교육/오락용 (Edutainment) SW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
-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 연수기회 확대

-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의 국제협정 등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「저작권법」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정비
-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구체적인 법적대응이 필요

### 민간의 정보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

- 정보 인프라의 조기 고도화 촉진을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지원
- 통신설비 설치공사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적 지원 강화
  - 통신설비 설치용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공장용 토지 등에 적용되는 기간인 3년으로 연장
  - 『도로법』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설비공사를 도로점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
  - 도로굴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통신관로공사에 대한 특례 인정 고려
  - 도로굴착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 향후 도로굴착시 공동구 설치 의무화를 검토

- 정보화 추진에 따른 법·제도의 정비는 궁극적으로 정보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사회질서를 정립하고 정보사회의 운영관리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귀결
  - 이에 따라 「민법」, 「형법」 등 일반법의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됨

###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

-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시장원리와 WTO의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정책과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이 됨
  - 산업정책은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인력양성, 기술개발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등에 국한
- 정보통신산업 투입요소의 국내조달과 수입간 균형성 유지
  - 정보통신부품,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국내개발 여부 결정시, 기술력, 경제성 뿐만 아니라 산업과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

### 정보화 추진과 정보통신기술 도입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

- 경제·행정·교육·복지 등 분야별로 사이버공간을 통한 업무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산업사회 제법령을 개선하고 정보의 유통 및 이용에 대한 규제 법령을 폐지
  - 전자문서의 정의,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확립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
  -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「사무관리규정」 등 행정관련법규의 정비
-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의 보호,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재고하기 위한 법적조치 정비

###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

-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며,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
  - 정부출연연구소 지원 중심에서 대학중심으로 전환
  - 기업에 대해서 융자뿐만 아니라 성공부상 창조조건 출연도 확대
- 정부가 모든 기술개발에 개입할 수는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 중 시장성,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전략분야를 집중지원

### 정보통신기술 교육기회 확충으로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

-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규교육 기회를 확충하

고 신기술 습득을 위한 향상훈련과 실업자 전환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

- 제도·환경의 정비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
  - 정보통신관련 대학원, 연구기관 등에서 여성인력 정원목표에 실시추진
  -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제도 개선으로 기술교육의 방향을 선도

####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

- 벤처캐피탈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자금력 강화
  - 벤처기업은 담보가 없고 업력이 짧아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우므로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 및 자금 조달을 지원
    - 코스닥 시장 활성화 : 추가 분산비율 강화(현행 20%→30% 수준)등
-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창업지원체제 구축
  - 대학 및 연구소에 창업지원센터의 설립·지원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

#### 수출금융 지원 강화로 조기에 해외시장 확보

- 개도국 통신시장 개방 및 이에 따른 투자가 몇 년 사이에 집중될 전망이며, 시스템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면 기회를 상실하므로 향후 몇 년간 집중적 지원이 필요
- 통신장비 수출시 Vendor Financing 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금융지원은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
- 통신망 현대화 사업이 활발한 국가와 정부차원의 외교활동 및 홍보활동, 타당성 조사 활동 강화

#### 통신서비스산업 경쟁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

-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경쟁이 도입되어 통신사업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쟁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음
- IMF 체제하에서 통신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

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사업자간 양도·합병 기준을 확립하여 퇴출장벽을 완화하여 통신사업의 부실화 방지

- 무선통신사업자간 Roaming을 유도하여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통신망을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 최소화

#### 방송산업 구조개편 및 통신·방송 융합촉진

- 방송정책 기능 통합으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
  - 지상파방송의 오랜 독과점 체제 지속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법률 체계 및 관련기관 이원화로 통신·방송 융합추세에 대한 대처 미흡
    - 통신·방송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콘텐츠-서비스-망 산업으로 재편됨
    - 멀티미디어산업은 통신·방송서비스 및 기기, 컴퓨터·가전, 영상·출판산업을 포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, 이들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정책을 통한 육성 필요
  - 정보통신부와 공보처의 방송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규제기능은 성격이 다른 경제·독과점 규제기관(정부기구)과 내용규제 기관(민간기구)으로 나누되, 현재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 규제기관을 하나로 통합
-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산업 구조개편
  - 매체간 경쟁촉진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진
    - 방송사업자를 네트워크(NO)-서비스(SO)-콘텐츠(PP)에 따라 분류
    - NO는 허가제도를 유지하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방송망 구축을 허가하며, SO와 PP는 각각 등록과 신고로 진입 자유화
  - ※ 다만 대기업과 언론기관의 지상파 방송서비스(SO), 보도채널(PP), 집입은 불허
    - SO채널 선택권 부여, PP 전문분야 지정 폐지 등 영업규제 완화
    - 위성방송,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신규서비스 도입 추진